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통합돌봄 전면 시행

도내 14개 시·군 동시 시행... 전담조직·재택의료 기반 구축해 의료·요양·돌봄 60종 통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부터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내 14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하며,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했던 공극자 중심 복지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돌봄 필요도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통합 지원을 받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후견인 기관 담당자도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총 118억 8,000만원을 투입하고, 도와 시군의 전담조직 구성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도내 전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6개소를 배치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가정에서도 방문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퇴원환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도와 14개 시군 국가책임의료기관 6개소, 종합병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맞손'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김관영 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최재용 익산 부시장 등이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 6개소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돌봄 체계는 현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군산의 한 80대

홀몸 어르신은 수술 후 퇴원 직후 돌봄 공백 위기에 놓였으나, 통합돌봄 연계로 식사 지원, 건강관리, 치매검사 등 9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했다.

이처럼 통합돌봄은 병원·시설 중심

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예방 돌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이용을 줄이는 한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만호 기자

도, 제 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현화·추모영상·참전용사 편지 낭독... 추모와 다짐의 시간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55인의 호국영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현화와 추모곡을 시작으로 추모영상 상영, 헌시 낭독, 기념사와 추모사,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500여 명의 주요 인사와 도민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



북도의회 의장, 김광석 35사단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민화 국립임실호국원장, 이한기 전북재향군인회 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군 장병,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1만호 기자

도, 2045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확정

'지속가능발전 선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 비전 설정 63개 전략·191개 시책 추진, 143개 지표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향후 20년을 내다본 지속가능발전 종합 로드맵을 확정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과 '추진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전략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전략 수립 의무가 부여된 이후, 도 차원에서 처음 마련된 장기 종합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4대 전략 17개 목표 76개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63개 전략과제와 191개 세부시책이 포함됐다. 특히 143개 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를 삼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순환형 관리체

를 도입해 실행력을 높였다.

비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도는 사람·번영·환경·협력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도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평가, 계획 재수립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전략은 전북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구체화한 첫 종합계획"이라며,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도, 전세사기 피해 전면 대응... 주거안전망 대폭 강화

336억 피해 속 3대 지원 확대... 월세·이사비·보증금 보호까지 촘촘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거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면 대응 전략으로 서민과 청년층 보호에 나선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이며, 이 가운데 57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규모는 약 336억 원에 달하며,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과 완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

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생활 안정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예산도 6억 원으로 늘렸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로 월세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

비를 새롭게 도입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사비 지원도 강화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도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

로 현장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주요 대학에 전세사기 예방 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도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을 달라"고 당부했다.

/1만호 기자

도,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내역 공개

신고자 평균 재산액 8억3498만원... 작년 대비 증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전북특별자치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과 시군의회의 의원 194명 등 총 202명이며, 시장·군수 등 6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전자편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받아 이뤄졌으며, 최초 공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변동 내역이 반영됐다.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약 8억3,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87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60명(29.7%)으로 뒤를 이었다. 20억 원 이상 보유자는 20명(9.9%)으로 확인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된 재산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동해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심사도 가능하다.

심사 결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1만호 기자

지역 서민금융 협력 강화

도, 동부권 새마을금고와 간담회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향 공유

동부권 6개 시군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함께 지역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인프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권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금융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시군 관계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총 23명이 참석해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도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소상공인 지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등 민생경제 대응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사회연대경제 주체 대상 금융 지원 확대 등 서민·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전북지역 새마을금고는 59개 금고로 구성돼 있으며, 총자산은 약 13조원, 거래자는 102만 명에 달하는 지역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전주 15개, 익산 8개, 정읍 7개 등 도내 전역에 분포하며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의정보고회서 무료 공연 제공 기초의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A를 3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A는 지난 2월 말경 개최한 본인의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하여 참석한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민 없이 138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1만호 기자

도, 'SPOEX 2026' 첫 참가... 스포츠기업·산업 경쟁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규모 스포츠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스포츠 기업과 전북의 산업 경쟁력 홍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6)'에 처음 참가해 전북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SPOEX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대표 스포츠 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3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최신 스포츠·레저 산업 트렌드를 선보인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내 스포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국

제 스포츠 도시로서 전북의 위상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력해 선발된 도내 스포츠 창업기업 3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운영한다.

참가 기업은 △니노스(모듈식 스포츠 팀 벤치) △도시농촌(토타트 기반 스포츠 이온음료) △크로슬루션(스포츠 시설 예약·발급 자동화 플랫폼)으로, 현장 전시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을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1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